

# 광주·전남, 2차 정부 추경 증액 예산 3천36억원 확보

국회 심의과정 정부안비 223억원 ↑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 183억 부활  
무안공항 경유 호남고속철 2단계도  
정부 지원조치 부대의견 수록 성과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예산은 총 3천36억원 증액·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된 3천36억원은 1단계 정부안 2천813억원 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23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이다.

무엇보다 전역 삭감됐던 동광주·광산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 183억원이 복원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경 편성 단계에서 국가·지자체간 사업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컸던 사업이다.

또한 전남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추경 예산안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광주·목포, 1천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국도 해상교량·터널 건설비 및 보상비(360억원) 등도 최종 반영됐다.

광주·전남 미래먹거리 산업 관련 예산도 좀처럼 확보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청사진과 관련, ACC(아시아문화전당)·양림권역·무등산을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2억원이 확보됐다.

또한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사업'(20억원), 'AI기반 창의문화공간 플랫폼'을 채우는 AI콘텐츠 개발(10억원) 등 인공지능 확산 사업 예산도 확보했으며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

업'(20억원), '국가생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3억원) 예산도 반영했다.

한전 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100억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됐다. 2025년도 본예산 100억원과 함께 총 200억원이 확보된 것이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입법·행정 지원 조치를 추경예산 부대의견에 담아낸 것도 주목된다.

특히 ▲동광주·광산 호남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지원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원만히 진행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역 및 인접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할인권 특별지원 강화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등이 부대의견에 담겼다.

이는 국회 차원의 정책 연계성과 실질적 후속 조치를 담보한 종합적 성과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발전의 실행력을 확보한 셈이다.

예결소위 위원으로 직접 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구)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민생 회복과 잠재된 경기 부양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광주·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숙원사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치밀하게 확보 전략을 마련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한발 앞서 긴밀히 협력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주 전남 추경예산 확보는 예결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구),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치단결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김진수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에 전남도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로 정책지정해달라”

김영록 지사, 박찬대 국회의원에 건의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기 조성 강조

광양·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공모 절차 없이 나주로 정책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현장을 방문한 박찬대 의원과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주 에너지산업 생태계와 나주 국가산단 조성을 연계해 나주를 국내 에너지 산업의 핵심 축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 절차 없이 나주로 정책지정 ▲광양·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120만평)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에너지기업 수요가 충분한 상황임을 고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의 조기 분양을 위해 산단 공사 기간이 단축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관련, 김 지사는 "나주는 세계적인 에너지 인프라와 핵심기술, 주민 수용성까지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300여개 전력기자재 기업 집적 ▲조선도 도체 시험설비 등 핵융합 분야 핵심기술 확보 ▲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미국과 중국이 인공태양 기술 패권을 두고 조 단위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 부지 공모 없이 나주를 정책적으로 지정해달라"며 "핵융합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반드시 나주 정책지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또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과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조성되면 전남은 세계적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며 "정부·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남 산업단지 분양률이 98%로 포화 상태"라며 "첨단소재·수소·이차전지 수요에 대응하려면 광양만권 120만평 규모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에너지산업 육성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전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 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서명했고 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현장을 방문했다"며 "전남도의 건의 내용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서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 열린다

9-11일 DJ센터...200여개사 참가

광주시는 6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시,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전시회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ESS ▲배터리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환경신기술 ▲자원순환 ▲ESG 등 12개 분야 200개사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다양한 환경보호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중에는 주요 참가 기업을 소개하고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라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바이어와 기관 관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상담회인 '동반성장페어'는 대기업·공공기관 80여개 사, 중소기업 130여개 사가 참여해 기업 간 매칭, 사례 발표, 정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

'KOTRA 수출상담회'는 해외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설명회,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포럼과 세미나도 열린다.

/기수희기자

## 완도 여순사건 희생자 전남 최초 직권조사

전남도는 6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전남 최초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완도지역 직권조사 대상은 총 125명이다. 완도읍, 금일읍,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약산면 등 6개 지역에 집중해 있고 모두 여순사건 당시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에 대한 협조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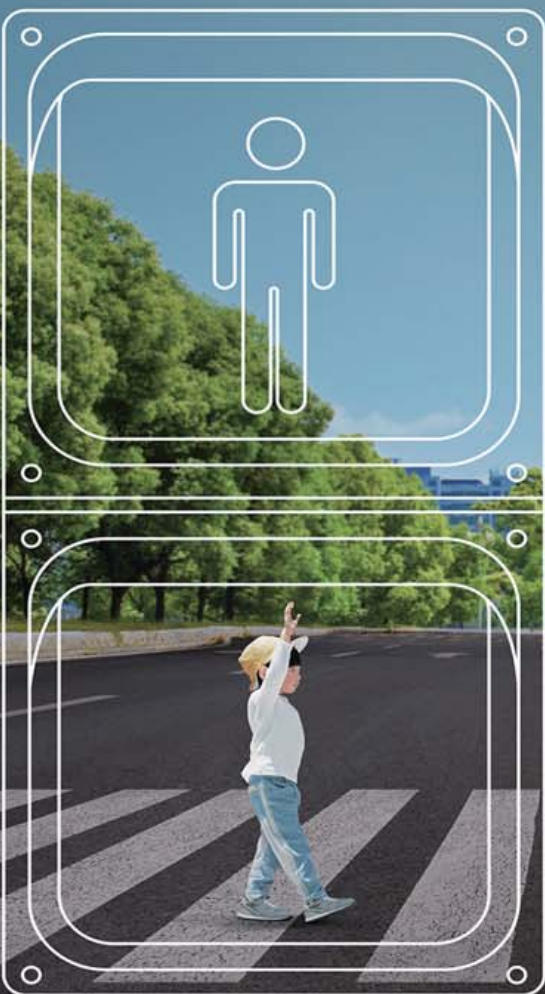
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이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우선 직권조사를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에 소장 중인 공적문서를 수집해 대상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는 한편,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112명)을 중심으로 현지 참모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CMYK